

第3章 實利外交 追求와 共同繁榮에의 寄與

第1節 經濟·通商 外交

1. 國際經濟의 動向과 推移

가. 低成長의 1991年 世界經濟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1991년의 세계경제는 어느해보다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되어 1980년대이후 최저 수준인 0.9%의 성장에 그쳤다. 1990년 8월의 걸프사태로 유가폭등과 소비, 투자 위축에 이어, 1991년에는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결과 1991년 선진 7개국의 실질경제성장을 1.1%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나타내었다.

1991년중 선진국 경제의 특징은 미, 영, 캐나다, 호주등 앵글로 색슨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두드러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내수확대, 통일특수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선진국간 성장의 양극화 패턴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고용도 크게 악화되었는데, 경기침체를 보인 북미와 서유럽제국의 실업률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일본과 구서독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하는등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금리부문에서도 나타나, 1991년중 주요 선진국의 단기 이자율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긴축 완화 조치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페더럴 펀드 금리가 연중 10차례 걸쳐 7%에서 4%로

인하 되었다. 이에 반하여 일본 금리는 1991년 상반기까지 전년의 고수준이 유지되다가 7월초 경기둔화 방지를 위하여 공정 할인율이 인하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독일 금리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3차례 걸친 재할인율 인상과 금융 긴축정책 강화로 금리 상승세를 지속하여 성장부문과 함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개도국은 NICs와 ASEAN의 실질경제 성장률이 1991년도 각각 6.2%, 5.7%로 전년수준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도 경제개혁 조치 성공으로 199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1991년에는 1.2%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구의 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상 혼란으로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어 -10.6%를 기록하였고 중동 경제도 걸프사태로 인하여 경제 성장율이 -4%로 후퇴하였다.

나. 國際金利 換率推移

〈國際金利의 兩極化 現狀〉

1991년중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경기동향에 대응한 공금리 조작으로 선진국간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등 국제금리 변동이 심하였다. 즉 미국과 일본은 경기 활성을 위하여 금리인하 정책을 채택하여 금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독일은 통독 특수 및 임금 인상 요구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 긴축정책을 강화하여 은행 재할인율과 금리가 인상되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 금리의 양극화 현상은 1992년중 미국의 금리인상과 독일의 소폭 인하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換率〉

1991년 상반기중 미달러화는 마르크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났으며,

8월 소련 쿠데타 발생시에는 한때 안전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연방 준비은행의 공금리 인하 정책으로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약세로 반전되었다.

다. 國際 原資材 價格 動向

〈下向 安定勢의 原油價〉

1991년의 세계 석유시장은 걸프전쟁과 소련 정변으로 인한 수급과 가격 변동 현상으로 특징지울수 있다. 그러나 두사태가 세계 유가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걸프사태가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유정 파괴로 원유 생산량이 격감하여 단기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반면, 소련 사태는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지역적으로도 주로 소련 석유 수출시장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유럽에 국한된 영향을 미치는데 그쳤다.

두사태가 유가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인 것으로써 장기적인 추세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1991년 유가는 배럴당 18-19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1次 產品 價格의 回復〉

지난 1989년부터 하락추세에 있었던 비석유 1차 산품가격은 1990-1991년 기간 중에도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전체적인 수요감퇴로 거의 전품목에 걸쳐, 1990년에는 전년비 -7.9%, 그리고 1991년에는 -5.7% 수준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품목별로는 특히 선진국들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광산물 가격이 -8.2% 정도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소련의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증대 및 수입감퇴에 기인하고 있다.

라. 國際經濟 環境의 變化

1991년도의 국제경제 환경은 동서 대결에 의한 냉전 구도의 종식에 따라 보호주의 강화, 지역주의화, 환경문제의 대두 등 여러가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 종식 후 국가간의 경제적 마찰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시장과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증진과 선진 기술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도 더욱 거세어짐으로써 우리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호주의 강화와 함께, EC를 중심으로 한 범구주 경제권, 북미 자유무역지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형성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이러한 경제권이 폐쇄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무공해화, 공해 상품에 대한 교역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구소련, 동구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인플레 심화, 경기침체 지속, 실업 및 외채의 증가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로 등장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안정 지원이 시급한 세계경제의 과제가 되고 있다.

2. 1991年度 輸出入動向 및 主要國別 通商現況

가. 1991年度 輸出入 動向

1986년 이후 흑자를 보이던 우리의 무역은 5년만인 1990년에 48억불의 적자를 보인 이래 1991년에는 이러한 적자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96.5억불의 적자를 기록 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통관기준으로 718.7억불,

총수입은 815.2억불이었다.

〈輸出入 動向〉

(단위: 억불, %)

구 분	1989년		1990년		1991년	
	금 액	증 가율	금 액	증 가율	금 액	증 가율
수 출	623.8	2.8	650.2	4.2	718.7	10.7
수 입	614.7	18.6	698.4	13.6	815.2	18.3
무역수지	9.1	-	-48.2	-	-96.5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1986~1988년중에는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고율 신장세를 보였으나 1989년이후 3년연속 낮은 성장에 머문것은 대외적으로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통상마찰 확대등에도 일부 기인 하지만, 대내적인 고율의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 둔화, 원화의 고평가 지속등이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급속히 악화시켜 온 데 그 주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한편 1988년이후 서비스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인력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수출산업의 여건 악화도 전반적인 대외경쟁력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입은 1989년이래 계속해서 16%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1991년에는 815.2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증가의 원인을 본석해 보면 주택건설등 내수호황에 따른 수입 수요의 증대와 자동화시설등 투자확대에 따른 기계류등 차본제의 수입 증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의 확대와 수입관세의 인하등 제세율의 인하로 수입품의 국내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1차 상품의

경우, 1990년도 4.0%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중화학품제품, 특히 선박,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특히 1990년도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낸 자동차, 철강제품의 수출도 동구권 및 중남미지역의 수요증대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경공업제품중 신발류, 완구류 등은 국내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중국·동남아 국가들의 저가공세, 국내 인력난등으로 인해 급격한 수출 부진세를 보였다.

반면 품목별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등이 모두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바, 일반 소비재의 경우 29.1%의 증가세를 보였고 자본재의 경우에도 설비투자를 위한 일반기계류 및 수송기계의 급격한 수입증대로 20.9%의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1991년도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대미, 대일 시장진출은 감소를 보인 반면 EC, 중동은 1989년의 수출감소에서 벗어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ASEAN, 중남미, 북방지역에 대한 수출은 33.7%~42.4%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바 있다. 반면 수입은 국내 수요확대 및 시장개방에 연유하여 미국, 일본, 중남미, 북방, EC, ASEAN등 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91년에도 미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주종 수출시장임을 유념, 한·미간 통상 마찰의 신속, 원만한 해결과 함께 기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신뢰를 증진토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전전소비운동과 관련한 미국측의 오해 제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한·미 협조, 1980년 이래 양국간 혼란이던 항공문제의 일괄타결, 기타 금융, 통신, 해운등 다방면에서 문제해결에 진전을 거둔 바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 및 기술이전 확대등 현안 해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91년 6월에는 제1차 한·일 무역 및 산업기술 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와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문제를 체계적이고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1992년 1월에는 미야자와 수상이 방한하여 양국 정부가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1992년 6월말까지 수립키로 정상간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EC 통상관계에서는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EC의 1992년 단일시장 완성 및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 EEA) 출범에 대비, 현지 투자증대를 도모하고 오랜 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타결함으로서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자유무역 창달, 일방적 보호주의에 대처하는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 CCC),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등 여타 통상관계 다자기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익확보에 주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상 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여 인도, 브라질등 10개국과 항공협정, 중국등 3개국과 무역협정을 서명 또는 가서명 하였다.

나. 主要國別 通商現況

(1) 美 國

1991년말 현재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최대 수출시장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7위의 교역상대국이자 제6위의 수출시장으로서 양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상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통상 교류는 계속 증대되고 있고 더욱이 냉전시대의 종식에 따라 경제·통상문제가 국제관계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경제·통상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韓·美 貿易動向〉

(단위: 억불, %)

구 分		1979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출	총 수출	150.5	218.5	302.8	347.1	472.8	607.0	623.8	650.2	718.7
	대미수출	43.7	62.4	107.5	138.9	183.1	214.0	206.4	193.0	185.5
	구성비	29.0	28.3	35.5	40.0	38.7	35.3	33.1	29.8	25.8
수입	총 수입	203.4	242.5	311.3	315.8	410.2	518.1	614.6	698.4	815.2
	대미수입	46.0	59.6	64.9	65.4	87.6	127.6	159.1	169.1	188.9
	구성비	22.6	24.6	20.8	20.7	21.4	24.6	25.9	24.3	23.2
수지	총수지	-52.9	-24.0	-8.5	31.3	62.6	88.9	9.2	-48.2	-96.0
	대미수지	-2.3	2.8	42.6	73.5	95.5	86.4	47.3	24.2	-3.3

1991년도 우리의 대미교역은 1990년도에 비해 수출은 4.1%가 감소된 185.5억불, 수입은 11.5%가 증가한 188.9억불로 약 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1982년 이후 계속 흑자를 보여온 대미무역수지가 10년만에 적자로 반전되었다. 한편 미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한국 교역은 수출이 전년대비 7.7% 증가한 155억불, 수입은 7.9% 감소한 170억불로 한국이 15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국간 통계차이를 감안할 때 양국간 교역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은 그간 누적되어온 방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증대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미통상법을 원용하여 주요교역 상대국들과 양자협의를 통한 시장개방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한편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중심으로 다자간 통상협상도 적극 추진해 왔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1991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4,219억불, 수입은 1.5% 감소한 4,881억불로서 무역적자는 1990년보다 355억불이 개선된 662억불로 무역적자 규모가 1984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의 貿易赤字 動向〉

(단위 : 억불)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무 역 적 자	1,383	1,521	1,185	1,086	1,010	662

1991년도 양국간 통상관계는 199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건전소비 운동이 수입억제 운동이라는 미측의 부정적 시각을 중심으로 불편한 양상을 보였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한해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도 중반부터 미측은 한국정부가 건전소비 운동을 명분으로 수입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양국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도 지연시키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자유, 공정 무역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이 농산물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결렬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등으로 우리의 통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국통상 관계가 다소 불편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한·미 경제협의회 및 한·미 무역실무회의 등 정례 통상문제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입장에 대한 미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91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외무차관과 미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고위급이 참여하는 제9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는 우리정부의 시장개방정책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건전소비 운동의 근본취지가 결코 수입억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수입품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관련 제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미측도 우리의 건전소비 운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호이해를 심화시켰다. 또한 우리측은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타결을 지원시키는 나라가 아님을 설득하였다.

1991년도에도 외국산 담배 비방현수막 제양, 외국산 과일 판촉전 중단, 신용카드 해외사용현황 조사등 소위 “수입반대” 사례에 대한 미측의 이의제기와 한국의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전년도와 같은 수입억제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표명등으로 한·미 통상관계에 긴장요소가 있었으나 외무부 제2차 관보 주재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호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1년도에는 한·미 통상분야에 조기 경보체제를 도입하여 사소한 통상문제가 양국간 통상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 대처하는 예방적 통상외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일환으로 외무부 통상국장이 대표하는 정부 통상관계 실무진과 주한미대사관간에 통상문제 실무협의체(Trade Action Group) 회의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1991년 7월, 1991년 9월, 1992년 1월등 일련의 양국정상 회담 개최를 비롯하여 양국 외무장관등 정부지도층의 빈번한 교류, 접촉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및 협력 분위기를 제고시킨 것도 양국 통상관계 증진의 바탕이 되었다.

1991년에도 분야별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및 이해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91년 6월 위성던에서 개최된 한·미 항공회담 결과, 1980년 아래 양국간 오랜 현안이었던 항공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 미국 본토내 6개지점등 9개 지점에 대한 추가운수권과 중남미 2개 지점, 유럽 1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미측이 주요관심을 표명한 금융시장 개방문제는 1991년 5월 한·미 비공식 금융회의 및 1991년 9월 제3차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우리측의 내국민 대우 확대및 금융시장 개방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우리측의 중기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도성예금 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발행한도 증액, SWAP 한도 감축유예 지속 등 원화자금 조달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시키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요건 완화 및 복수지점 단일화 인정등 외국환 관련 규정 명료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식시장 개방 금리자유화 계획, 외국환 관리법 개정등 중장기 금융시장개방 확대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아직도 한국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개방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금융분야는 당분간 양국간 현안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그밖에 한·미 해운회담 결과 외국선사에 대한 육상운송 개방을 확대하고

한·미 섬유협상을 통해 한·미 섬유협정을 1993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였으며, 특히 미측 관심사항인 영업비밀 보호입법 및 반도체칩 보호입법을 추진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OECD 조선분과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조선협상 및 다자간 철강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미간의 현안 사항을 다자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미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라 통관·검역 문제등 기술적인 현안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역의 확대, 균형화 추세가 정착되면서 개별현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좀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통상관계의 차원을 높여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향하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2년 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증진 방안의 하나로 통관, 표준, 기술, 투자등 4개 분야에서 교역 및 영업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2) 日 本

한·일간 교역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후 우리나라의 일방적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며, 1991년에는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87억불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이는 대일 수출이 124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2.2% 감소한 반면, 대일 수입은 211억불로 13.7%나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이와같은 대일무역 적자의 급격한 증가는 1991년도에 대미 무역수지 및 대EC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것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1년중 양국간 교역량은 335억불로서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교역량의 증가율인 13.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대일수출이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대일 주종 수출품목인 섬유제품, 신발류, 가죽제품 등의 수출이 1990년에 이어 부진하였으며, 대신 철강등이 호조를 보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유기화학품, 광학기기의 수입이 두드러졌으며, 이들 5개 품목의 수입이 전체 대일수입의 71%를 차지하였다.

〈韓·日 貿易動向〉

(단위 : 억불, %)

구 分		1987	1988	1989	1990	1991
수 출	금 액	84.4	120.0	134.6	126.4	123.6
	증 가 율	55.5	42.3	12.1	-6.1	-2.2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17.8	19.8	21.6	19.4	17.2
수 입	금 액	136.6	159.3	174.5	185.7	211.2
	증 가 율	55.5	42.3	12.1	-6.1	-2.2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3.3	30.7	28.4	26.6	25.9
무 역 수 지		-52.2	-39.3	-39.9	-59.3	-87.6

(자료 : 관세청통계)

최근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저하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일 수입증가 예상등을 감안할때 대일 무역불균형의 시정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민·관이 협력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1991년 1월 방한한 카이후 일본수상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하였으며, 1991년 4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등의 기회에도 일본측의 대한 수입확대 노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1991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동경에서 제1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와 산업·과학기술협력증진 문제가 폭넓게 논의 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0년 11월 개최된 제14차 한·일 정기각료회담시 양국간 무역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한·일 무역회담을 확대, 개편하여 빌죽시킨 위원회이다.

1991년말에 이르러서는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을 앞두고서 크게 확대된 대일 무역적자를 두고 양국 정부간 무역불균형 시정 방안이 집중적으로 협의되었으며, 그 결과 19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 방한시 양국 정부가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1992년 6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양국정부간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한·일 경제협회와 일·한 경제협회간 제23차 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1991년 9월 18일-19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간 제8차 합동회의가 1991년 10월 12일-1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무역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 민간경제계간 협력문제가 논의되었다.

항공분야에서는 1991년 6월 5일-7일간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항공회담에서 양국정부가 서울과 오끼나와(沖繩), 다키타마쓰(高松), 오오이따(大分)간에 정기 항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일간 항공 노선은 총 19개에 달하게 되었다.

(3) 歐洲共同體

EC는 92년말까지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단일통화 창출과 경제통화정책의 공동실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단일시장 분야에서는 1992년 1월말 현재 전체 282개의 입법사항 중 218건이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77%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EMU 분야에서는 지난 1991년 12월 9일-10일간 화란 Maastricht에서 개최된 EC 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을 포함한 구주동맹(European Union) 조약안에 합의함으로써 EC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러한 내부적인 통합과정과는 별개로 EC는 1992년 10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7개국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을 창설키로 합의하였으며, 92년 4월 14일 EEA 창설협약에 가조인하였다. 동 협약이 각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에 의해 비준되면, 1993년 1월부터 EC-EFTA 지역은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이 실현되는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EC는 1991년 12월 평가리, 폴란드, 체코등 동구3개국과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트3국과 제휴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 EFTA 국가들과 동구권 국가들은 EC 가입을 신청하였거나 추진중으로 21세기 이전에 유럽전체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제불러화 움직임은 우리와 같은 역외국가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시장확대에 따른 수출기회의 확대, 개별회원국별 규제 철폐와 표준 및 기술규격의 통일로 원가절감 효과, 그리고 제반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수출 및 투자촉진이 가능해지는 반면 역내무역 전환효과, 시장확대로 인한 EC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외무역 장벽의 강화 가능성등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EC의 대외 통상정책은 단일시장 완성을 위해 공동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책중의 하나로서 로마조약에 의하면 관세를 포함하는 모든 대외 무역정책은 회원국대신 공동체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C의 대외 통상정책은 공동이익 추구, 국제무역의 균형, 확대 그리고 국제무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점진적 철폐 및 관세장벽 완화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통상정책으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공동관세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등과 같이 국제수지 불균형, EC 산업에 대한 피해, 시장교란등의 이유로 EC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보호정책, 그리고 무역상대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별 차별화정책등을 들수있다.

EC는 우리의 3대 교역시장중 하나로서 미국(24.4%), 일본(21.0%)에 이어 제3위(12.8%)를 차지하고 있다.

한·EC간 교역은 지난 5년간 연 32%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지면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EC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반면,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어 1988년까지 약 20억불의 흑자기조가 1989년이후 대폭 축소되었고 지난해에는 1억5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韓·EC 貿易動向〉

(단위 : 억불)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수 출 (전년비 증가율, %)	66.0 (53.2)	81.3 (23.2)	73.9 (△9.1)	88.4 (19.6)	97.3 (9.5)
수 입 (전년비 증가율, %)	46.1 (43.5)	60.4 (31.0)	64.9 (7.5)	84.1 (29.5)	98.8 (17.5)
수 지	19.9	20.9	9.0	4.3	-1.5
대구주수출 / 총수출(%)	16.8	16.6	14.2	18.5	17.8
대EC수출 / 대구주수출(%)	83.2	83.3	83.3	73.7	75.9

최근 대 EC 수출부진은 국내요인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에 기인하는 바도 많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전자제품, 섬유류, 신발류등 일부품목에 편중되어있는 수출구조상의 약점과 함께 EC측의 반덤핑 관세부과등 수입규제 조치에 의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기 3개 품목이 대 EC 총수출(1990년)에서 65%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품목들은 EC에게는 민감품목들로서 전자제품은 반덤핑조치, 섬유류는 섬유쿼터, 신발류는 수입감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다.

EC는 세계 최대의 시장(1990년 세계 총수출의 40.7%, 총수입의 40.9% 차지)일 뿐만 아니라 EC 통합의 가속화와 EEA 창설등으로 그 잠재성과 우리의 미미한 EC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수출확대의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시장관리 활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EC의 1992년 단일시장 완성 및 EEA 출범에 대비, 현지 투자증대 및 EC 산업과의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대 EC 진출 및 호혜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수립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EC측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EC 집행위 및 회원국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한·EC 업계간 협력강화가 EC의 수입규제 방지에 긴요한 점임을 감안하여 1991년 6월 창립된 EC주재 한국경제인 협의회(KECEC)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EC 통합 및 EEA 설립동향을 상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에 미칠 영향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1989년 12월이래 운영중인 EC 통합대책 실무위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부처간 및 정부·업계간 협조를 보다 긴밀히 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한·EC간 양측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EC 회원국들과 양자간 협의체널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다.

한·EC간 오랜 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1991년 11월 타결되어 우리는 EC에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로하는 한편, EC측은 대한국 일반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1992년에 회복시키고, 한·EC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제약산업분야 기술연수를 시행키로 하였다.

정부는 EC측에 대해 1986년이래 EC 집행위측이 우리상품에 대해 20건이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대만등 여타국가에 비해 가장 많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을 중시, 반덤핑 조사개시요건 강화, 공정하고도 신속한 조사 진행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EC간 합의에 따라 1993년이후에도 GSP를 계속 공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EC 역내 우리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회원국들은 우리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한바 있다.

현재, EC측은 우리나라 주세제도 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 금융시장 개방등을 요청하고 있다. 양측이 제기하는 사항들은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4) ASEAN.

아세안과의 통상관계는 산업구조상의 상호 보완성 및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초로 뚜렷한 현안없이 팔복할만한 성장을 계속하여왔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경우 아세안과의 통상규모는 수년내 EC와의 교역규모를 추월하여 미국, 일본 다음의 제3대 교역상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1년도 들어서는 수출 71.1억불, 수입 61.2억불을 기록하여 종래 무역적자에서 9.9억불의 흑자로 반전하였다.

〈對아세안 交易現況〉

(단위 : 억불)

	1988	1989	1990	1991
수 출	30.5	39.8	50.6	71.1
수 입	34.3	41.5	50.9	61.2
수 지	-3.8	-1.7	-0.3	9.9

(자료 : 관세청 통계)

국가별로는 필리핀, 태국, 싱가풀과 협자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와는 원자재 수입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아세안과의 교역관계를 중시하여 대아세안 관계증진에 노력한 바, 1991년에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되어 1991년 7월에는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아세안 확대외상회담에 참가하였으며, 컴퓨터망 설치사업, 관세평가 사업을 비롯한 각종연수 실시등 협력사업도 다방면에서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아세안이 그동안 정치적 색채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방향으로 그 협력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ouncil : EAEC)안 등이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FTA등 추진추이를 면밀히 분석, 대응코자 한다.

양자관계에서도 아세안 6개국과 양자외무장관, 통상장관회담이 수차 개최되어, 양자간 통상현안 및 교역증진 방안등을 논의한 바 있다.

3. 多者間 貿易體制 參與

가.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

(1) 協商 經過

1986년부터 시작된 UR 협상은 1990년 12월의 브랏셀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분야의 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미·EC간의 입장 대립으로 당초 목표대로 협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연기된 바 있다. 1991년도 들어 연초부터 UR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이 논의되어 오던중 1991년 2월 16일 개최된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는 구체적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가급적 조속히

협상을 타결키로 결의하고 UR 협상의 재개를 공식 결정하였다.

또한 1991년 5월 미국 의회는 미국 행정부에게 UR 협상의 권한을 위임하는 신속승인절차(Fast-track) 시한을 1993년 5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UR 협상의 재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협상 참가국들의 조기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대립과 걸프전쟁, 동구권의 개혁등 무역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1991년 하반기까지 기술적인 사항이 논의되었을뿐 협상의 큰 진전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unkel 갓트 사무총장은 1991년 도중에 UR 협상 타결을 위한 획기적 진전이 없는 경우 1992년도의 미국 대통령 선거, EC의 단일시장 출범등으로 UR 협상의 타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1992년 2월까지 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새로운 계획을 1991년 9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에따라 1991년 12월 20일 무역협상위원회에는 UR 협상의 전분야에 걸쳐 각 협상그룹 의장이 제출한 협정 초안이 제시 되었으며 전 협상 참가국들은 동 협정 초안을 검토한 후 1992년 1월 13일 무역협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단계 협상을 추진한 후 1992년 2월까지는 협상을 종결 짓기로 하였다.

(2) UR 協商 最終 協定 草案의 性格

1991년 12월 20일 제시된 UR 최종협정 초안(일명 Dunkel 초안)은 각 분야별로 지난 5년간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농산물등 일부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중재안을 제시하여 완전한 협정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Dunkel 갓트 총장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협정 초안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협상 참가국들에게 현 협정 초안을 수정없이 일괄적으로

수락할 것을 종용 하였으나, 미국, EC, 일본등 주요 협상 참가국들이 일부 협정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EC간 농산물 협상의 타협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 最終 協定 草案에 대한 評價

이 협정 초안을 검토하여 보면 전반적인 교역 자유화 관련 분야와 선진국의 자의적인 보호조치를 개선할수 있는 규범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이 상당수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협상 참가국은 관세를 1993년 부터 5년간 33% 인하하게 되며, 각종 비관세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 MFA)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섬유교역의 자유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반덤핑 규율의 강화, 수출자율 규제등 회색조치의 철폐, 선진국의 일방조치 억제등 잣트체제와 기능의 강화는 우리의 무역이익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관련 투자조치, 서비스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국내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켜야 하는 개방의 부담이 있으나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국제화 및 개방조치 결과, 상대적으로 부담이 경감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우리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협정 초안은 그간 우리 정부의 일관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세화의 예외를 확보하는 어려운 교섭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4) 우리 政府의 對應

정부는 기본적으로 UR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국제무역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는 판단하에 그간 UR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1991년 1월 서비스 분야의 최초 양허 계획표를 제출하고 서비스 각 분야별 규범제정 협상과 관세분야의 무세화 협상에도 적극 참가하는등 모든 협상분야에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적극 대처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산물 분야에서 쌀등 기초식량에 대한 관세화의 예외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각적인 외교교섭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개방의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최종 협정 초안의 수정 노력, 양자협상을 통한 주요협상 상대국에 대한 교섭등 모든 협상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나. 여타 GATT 活動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개최된 제47차 갓트 총회와 월례 갓트 이사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주요 무역국으로서 갓트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1991년도에 실시된 EC, 헝가리등 9개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TPRM) 이사회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도 그 시기를 1992년 7월로 확정하고, 관련 보고서 준비작업에 착수 하였다.

또한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새로운 잇슈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를 검토하는 “환경관련 무역조치 검토 작업반”이 1991년 5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는바, 우리나라는 환경을 이유로한 일방적인 무역 조치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는등 이 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왔다.

다. 其他 多者間 協商

개도국간의 상호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생산 및 고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38개 개도국간에 특혜 무역협정(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P)이 1989년 4월부터 발효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9년 6월부터 이 협정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1991년부터는 이 협정의 적용 범위를 더 확장하기 위한 제2라운드 협상 개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1월 22일 테헤란에서 개최된 GSP 각료회의에서 1992년 7월 이전에 제2라운드 양허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개도국과의 교역증진과 유대 강화는 물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 하는 방안으로 이 GSP 제2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철강수출국과 미국간의 수출자율규제 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 VRA)으로 잣트체제 밖에 있던 철강교역을 새로운 국제철강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간 철강협상이 미국 주도로 1990년 10월부터 시작되어 1991년말 까지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요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철강교역의 자유화를 가져올 이 협상에 참여 하였으며 다자간 철강 협정에 수출자율규제 협정의 폐기, 보조금 지급금지는 물론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 조치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협상력을 경주하였다.

4.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와의 協力

가. 概 要

1991년은 우리의 대 OECD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된 해였다. 즉, 그간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던 한·OECD관계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돋움하게 되는 많은 활동이 있었는바, 그중 주요한 것은 3차에 걸친 정부조사단의 대 OECD파견, 우리 정부의 대 OECD관계 강화 서한발송, OECD사무총장 방한을 비롯한 활발한 인사교류, OECD총기 연수프로그램의 수립·시행, 한·OECD 정책협의회 개최등이다.

나. OECD 調査團 派遣

정부는 1991년 4월 24일-30일간 관계부처의 실무급 대표로 구성된 OECD 조사단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OECD 조사단 파견은 지난 1990년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OECD 협력문제에 관한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걸프사태 발발, 선진국의 통상압력 심화, 무역적자등 국내경제 상황 악화등 불리한 여건으로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외무부는 OECD와의 협력 관계는 국가 장기목표의 하나로써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하여 한번 수립한 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 1991년 상반기중 조사단 파견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OECD 조사단은 1991년중 3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바,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OECD 산하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상황 및 가입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 조사할 수 있었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며 가입에 따른 의무부담이 적은 위원회 부터 단계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OECD 정식가입에 대비하여 자연스런 가입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대한 적응력을 단계적으로 배양해 나갈수 있었다.

구 분	기 간	조 사 분 야
제1차 조사단	4월 23일-30일	경제정책, 무역, 자본이동, 무역외거래, 공업
제2차 조사단	9월 2일- 7일	에너지, 자원, 환경, 농업, 수산업, 체신
제3차 조사단	11월 27일-29일	개발원조, 과학기술, 교육, 해운, 관광

다. 第3次 OECD-DAEs 對話

OECD와 아시아 신흥공업국(Dynamic Asian Economies : DAEs, 종래의 아시아 NICs 외에 태국, 말레이지아 등을 포함한 개념)과의 대화는 1990년도에 4회에 걸쳐 개최된바 있었는데, 1991년도에도 6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OECD-DAEs 대회를 통해 경제정책의 각분야에서 국제적인 동향과 추세에 대해 의견을 넓히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실정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한편, OECD와의 협력관계의 저변을 넓힐수 있었다.

第3次 OECD-DAEs 對話

개 최 일 시	장 소	주 제
1991년 2월 27일-28일	파 리	국제무역 동향
1991년 5월 6일-7일	싱 가 폴	증권시장 정책의 최근동향
1991년 5월 15일	파 리	거시경제 정책 대화

개최일시	장소	주제
1991년 5월 27일-28일	서울	OECD/DAEs간 경제적 연관관계
1991년 6월 10일-11일	헬싱키	중동구의 세계경제 편입
1991년 6월 19일-20일	파리	세계경제의 장기 전망

1991년에는 상기외에도 한국의 7차5개년 계획에 관한 세미나(11월 20일), OECD 원자력에너지기구(NEA)와의 세미나(12월 5일-6일), 해운산업 동향에 관한 OECD/DAEs 세미나(12월 18일-19일)가 열렸으며, 조선분야에서는 1991년 중 5회에 걸쳐 OECD 조선협상이 개최되었다. 한국은 OECD 조선협상의 주요 당사국으로써, 공적수출 신용기간, 보조금 철폐시한, 선박dump 규제제도, 분쟁해결 절차, 각국의 계획 조선등 기타 조선산업 전반에 관한 국제적 정책 협조의 성문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조선산업의 이익보호를 주안점으로 한 우리나라 입장은 능동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다.

라. 韓·OECD 關係強化 方案 提示

정부는 제1차 OECD 실무조사단이 OECD를 방문한 직후인 1991년 5월 20일 대외협력위원회를 개최, 그간의 한·OECD 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OECD 가입 문제 자체보다 OECD와의 관계증진에 초점을 두어 각분야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위원회 활동참여, UR과 연계된 국내 준비작업의 적극 추진, 우리국민의 OECD 및 국제화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도모키로 하였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경제 여건이 성숙 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0년대 중반에 OECD 가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유도키로 하였다. 한편 OECD의 타니구찌 사무차장은 서울에서 개최된 OECD/DAEs 세미나

(OECD/DAEs간 경제적 연관관계) 참석차 방한, 정부내 주요 인사와 한·OECD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동 사무차장은 OECD가 한국을 차기 회원국 후보로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단계적 접근방식(step-by-step approach)에 대해 이해는 표명하나, 적극적인 OECD 가입 교섭을 추진중인 멕시코의 예를 감안,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포함한 협력 의지의 대외공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OECD 가입문제는 한국의 통계적 경제력만으로는 나타낼수 없는 사회 심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가입의사 공식표명은 당분간 어려우나, 담당 차관보등 실무 레벨 서한을 통해 OECD 관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상기에 따라 6월 18일자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서한이 OECD측에 발송되었으며, 우리측은 동 서한에 개발센터(DC)에 정회원 가입,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옵서버 가입, 호주, 일본, 미국의 경제검토 회의에의 참여의사를 각각 표명하고, 추가 조사단의 파견, 한·OECD 세미나 개최등 협력 활동과 궁극적인 OECD 가입에 대비한 OECD 중기 연수 파견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20명의 연수 실현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전반적인 한·OECD 협력 증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 OECD 事務總長 訪韓

OECD 사무총장의 방한건은 1991년 7월 OECD측에서 먼저 제의하였다. OECD측은 Pays 사무총장이 10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IMF/World Bank 연차총회 참석 기회를 이용하여, 태국, 홍콩, 한국등 3개국을 방문키로 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희망해 왔다.

우리측은 동 방문이 OECD 가입 종용등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설정 파악의

성격임을 확인하고, 동 기회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금후 본격화될 한·OECD 실무협력 관계 강화에 OECD측의 협조를 확보한다는 복안으로 OECD측의 요청을 수락, 외무장관 명의로 공식 초청하였다. Paye 사무총장은 10월 15일-17일간 방한, 대통령을 예방하고, 부총리, 외무장관, 상공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면담하였으며, “OECD와 세계경제 전망”의 주제로 재계인사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OECD 가입문제와 관련, 그간 일부 정부부처나 언론에서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심화와 무역적자의 악화에 따른 경계 의식의 작용등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제기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세계경제 흐름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한국 경제력의 신장 및 국제적 비중 증대로 이에 상응한 역할 수임이 불가피하다는 대세론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었는바, 노대통령은 Paye 사무총장 접견시, 이 문제에 관해 “1992년부터 실시되는 7차 5개년 계획기간내에 OECD 가입 추진” 입장을 밝힘으로써 가입시기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게 되었으며, 상기 입장은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었다.

5. 科學技術協力

가. 科學技術의 國際動向

최근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에 따른 전후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세계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걸프전에서 드러난 첨단무기의 위력은 국가안보와 국방도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과학기술의 경우, 선의의 경쟁과 협동연구의 양면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 각국은 정책의 주안점이 과학기술력 제고를 바탕으로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경제에 있어 제품경쟁력의 결정요인이 자본·노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서 지식·정보중심의 기술경쟁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세계각국은 기술개발에 정부가 개입하여 산·학·연 협동체제에 의한 신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더불어 선진국은 기술경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보호장벽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개방화, 단일체제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진전되어 각 블럭권들의 기술개발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의 UR 협상에서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시장을 개방시키면서도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통해 독점화하는 추세이며 1991년 6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세제금융상의 특혜, 연구비지원등)이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간 무역마찰을 야기한다고 보고 이에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차별 칠폐등을 결의 하였는바, 선진국들은 이러한 신국제질서의 형성을 통한 기술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개발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새로운 기술수요의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개발노력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자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 기술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협력대상국의 확대와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협력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나. 科學技術協力 現況

1991년도는 과학기술외교에 있어 어느해보다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우선 미국과는 지난 1988년이래 진행되어온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비밀특허보호협정 체결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 가서명됨으로써, 조만간 체결될 예정인바,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계기가 되었다.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은 1976년 11월 체결된 이래 1988년 10월 미국측의 지적소유권 보호요구로 폐기되었으며 1991년 12월 양측 실무자간 문안합의에 도달하였는바, 동협정은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실시를 규정하고 있는점에서 특징적이다.

한·미 과기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국의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등 그동안 과기협정의 실효에 따라 폐기되었던 기관간 협력약정들도 다시 체결되어 협력의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며 또한 양국간 과기협력을 정기적으로 종합 조정하게 될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설치되어 보다 내실있는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연구등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명내지 특허권의 권리배분등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미국측에서도 종전에 비해 제반협력 활동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등 7개 침단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공동연구개발노력과 아울러 장기적인 협력사업 수행 및 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담할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운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과기협정체결이 이루어진후 양국간 과기공동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국 초전도 입자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 SSC) 건설사업 참여문제도 지난 한해동안 큰 진전을 보여 1992년부터 9년간 총 240명의 우리의 과학기술자가 동 건설사업에 참여함과 아울러 우리의 관련 산업체가 SSC건설에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기본계획에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구체적인 참여증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약정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에서도 성과가 적지않았다. 한·일 양국은 1985년 12월 체결된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계기로하여 점차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동협정에 근거한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는 1986년 8월 서울에서의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면서 기관간 협력, 공동연구등의 협력과제를 도출·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1년 11월 21일-2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회의에서는 지능형 생산시스템 관련기술 및 신경회로망 컴퓨터등 우리측 제안 20건과 일본측 제안 17건의 협력과제가 신규 합의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합의, 추진키로 한 협력과제는 기합의 협력과제 80건을 포함해서 모두 117건(추후협의과제 6건 제외)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0년 12월 한국과학재단(KOSEF)과 일본학술진흥회(JSPS)간 체결된 기관간 협력약정을 근거로 제1차 한·일 기초과학교류위원회가 1991년 5월 22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으며, 1991년 10월 15일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간에 “신소재 특성평가센터 설립” 추진사업에 관한 협력각서가 서명·교환되었다.

동사업은 향후 5년간 일본측에서부터 기자재 및 전문가 지원, 우리측 연구원의 일본연수등을 주내용으로하는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원자력 평화적이용에

관한 협력각서”를 근거로 1991년 제1차 한·일 원자력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1991년 11월 13일~14일간 제2차 한·일 원자력 협의회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원자력시설 보수용 지능로보트 개발” 및 “저준위 방사선 계측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교류 및 정보교환” 등 2건의 신규과제가 합의, 기합의과제 23건을 포함해서 총 25건의 협력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독일과의 과학기술협력은 주로 독일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자재지원, 훈련생 독일연수등 기술원조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이제는 양국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첨단 기술분야의 공동연구, 연구기관 간 협력 및 과학자 교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독 양국간 공동연구는 1991년 현재 신소재·레이저·자동차등의 첨단기술분야에서 양국 연구기관간 16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1991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독일의 첨단기술박람회(TechnoGerma Seoul 1991)에는 270여개의 독일기업이 참가한 대규모 기술박람회로 독일의 첨단기술 소개 및 전문 분야별 심포지움이 개최되는등 한독간 산업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과는 1991년 2월 서울에서 양국정부간 과학기술협력 방안협의를 위한 제4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양국간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정보교류등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1991년 현재 한·영간 7개의 공동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1991년 9월에는 한국과학재단과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간에 과학자교류, 공동연구과제 발굴, 공동세미나 개최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각서가 교환됨으로써 기존의 영국 과학한림원(The Royal Society)과의 협력사업과 함께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1년 11월에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증진키 위한 한·영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 차세대 원자로 및 핵폐기물 관리등 연구협력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2년 상반기중에 제1차 한·영 원자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프랑스간에는 1981년 4월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초로 1986년-1990년 기간중 30여개의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1년 현재 9건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 9월에는 한국과학재단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간에 과학자 교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서가 체결됨으로써 한·불간 과학자 교류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태리와도 1991년 7월 제3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기술분야별 기관간 협력 및 협표준 비교측정, 유전학분야등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EC는 약화된 기술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ESPRIT, RACE, BRITE등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대한 경제기술 불리ух성을 위해 1992년 EC 통합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협의되어온 EC와 EFTA를 통합한 EEA(European Economic Area)의 1993년 창설을 위해 EEA조약에 1991년 11월 가서명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주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1983년 3월이래 한·EC 고위협의회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바, 199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고위협의회에서 우리측은 한·EC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EC 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등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증진을 강화키로 하였다.

특히 1991년도에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의 가능분야와 협력방법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1991년 8월에는 양측의 연구보고서를 상호교환, 양측간 과학기술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1992년 상반기에 한·EC 과학기술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양측간 과기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991년 9월 브رات셀에서 개최된 한·EC 지적소유권회담에서는 그동안 양측간 주요현안이었던 지적소유권 보호협상이 타결되어 협력증진의 장애를 제거하였는 바, 양측은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양측 연구보고서를 토대로한 공동세미나의 개최 및 우리측 의약분야 연수생의 EC측 파견등에도 합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같은 한·EC 합의사항을 1992년중 조기실현하고 국내연구소·민간기업등의 과학기술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여 EC측에 제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과학자교류, 정보교환, 세미나개최등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련등 동구권국가와의 협력관계발전은 과학기술외교의 팔목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은 1990년 12월 양국정부간에 체결한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원자력협력 의정서에 입각, 1991년 3월에 제1차 한·소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고속증식로 개발 및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이용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사업과 세미나 개최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1991년 6월에는 제1차 한·소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48개의 첨단기술 기업화과제 추진, 상호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고급과학기술자 교류 및 소련첨단기술전시회의 서울개최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1991년 6월 우리나라 KIST 및 소련 과학아카데미에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센터를 중심으로 소련과의 기계·자동차·소재분야 콘소시움 형성이 진행중에 있다.

한·소 과학기술자교류는 항공우주, 기계, 테이저 및 물리분야의 소련침단 과학기술인력을 국내연구소·대학·산업계등에 유치,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과기공동위원회에서 연간 50명의 과학자교류를 추진키로 합의 하였으며 1992년부터 상호교류에着手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중인 침단기술 이전 기업화과제 추진을 위해 소련측 기관으로부터 약 80명의 과학기술자를 중·장기로 유치·활용할 계획이다.

동구권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은 1989년 3월 형가리와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효시이며 1990년 12월 제1차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사업을 추진, 합의 한 바 있다. 특히 국제공동 연구과제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원과 형가리의 자동차연구소간에 1991년-1992년 기간중 유연 생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양국간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협력사업의 발굴 및 협의등을 위해 부다페스트공대내에 한·헝 기술협력센터를 1992년초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동 센터는 앞으로 양국간 협력사업추진은 물론 여타 동구권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촉진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유고, 체코등과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료·기계·정밀화학·제약등의 분야가 상당한 수준인 체코의 경우 앞으로 헝가리와 함께 동구권 과학기술 협력의 거점국가로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구권국가와의 협력에 있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등과도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과학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인력교류를 활성화해 나갈방침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에 비추어볼때, 동구권국가들과의 협력은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의 기술 향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각국 특화기술에 따른 저명 과학기술자를 유치, 국내대학·연구기관·산업계등에서 기술지원·공동연구·강의등의 추진이 첨단기술이전에 매우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수립중에 있다.

6. 資源協力

우리나라는 석유등 주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도입과 원양어장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외교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가. 에너지 鎌物資源

국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등에 따라 석유·가스등 1차 에너지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도입을 위해 주요 자원보유국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업체 주도의 자율적 자원도입을 적극 유도키 위해 해외자원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원협력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석유·가스등 1차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산유국과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유 도입의 지난친 중동 의존도 (73.7%)를 지양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러시아, 인니, 말레이지아등 국가와 석유등 자원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작년도 주요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1年度 國別 原油導入 現況〉

(單位 : 千B, FOB)

區 分	'90		'91		前年對比 (%)
	物 量	%	物 量	%	
사 우 디	39,616	12.8	133,588	33.5	237.2
이 란	34,287	11.1	52,775	13.2	53.9
오 만	63,686	20.7	51,155	12.8	△19.7
U A E	49,877	16.2	46,136	11.6	△7.5
카 타 르	6,610	2.2	8,133	2.0	23.0
中 立 地 帶	7,338	2.4	2,024	0.5	△72.4
印 尼	19,097	6.2	33,436	8.4	75.1
말 레 이 지 아	23,135	7.5	26,103	3.1	6.2
브 루 나 이	11,514	3.7	12,225	6.5	12.8
中 國	7,209	2.4	7,551	1.9	4.7
러 시 아 聯	214	0.1	570	0.1	166.4
멕 시 코	3,091	1.0	1,205	0.3	△61.0
이 집 트	5,640	1.8	2,570	0.6	△54.4
알 제 리	1,457	0.5	1,808	0.5	24.1
기 타 지 역	35,597	11.4	20,025	5	4.4
合 計	308,368	100	399,304	100	29.5

또한, 자원협력 중점공관 운영을 통한 자원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1991년도에는 주요 보유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자원협력위원회,

한·인니 임업위원회,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원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세계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급전망, 기술협력 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나. 水產資源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수산물 총 생산량의 28%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및 수산자원 자국화 정책의 확대와 환경, 자원보존등을 이유로한 국제사회의 공해조업 규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업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3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공해상에서 유자망조업을 금지하는 UN총회 결의안(46/215)이 1991년 12월 채택됨으로써 북태평양 오징어어장을 잃게 되었으나 어법전환등을 통해 페루등 남미제국에서의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수산외교를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1년 9월 러시아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입어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페루, 가이아나, 알젠틴, 우루과이, 멕시코등과는 어업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어장의 계속적인 확보차원에서도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불란서등과 정부간 어업회담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인 입어보장 및 어업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1991년도에는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IWC) 및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ICCAT)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공해 수산자원 보존 노력에 협조하는 동시에 3차례 결친 베링공해 관련국회의에 참가하여 공해상 자유조업권 유지를 위한 수산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오징어 주요어장인 포클랜드 보존수역(FICZ) 내측 및 외측

공해상에서 우리어선 84척이 조업하여 오던중 영국과 알젠틴은 1990년 12월 26일부터 1년간 FICZ 이원 50마일 수역내에서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1991년 12월 동 조업금지를 1992년 12월 26일 까지 연장하였는 바, 이에 대응하여 동어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민간업계를 통한 노력도 주목된다.

7. 環境分野 協力

가. 國際環境協力 動向

1980년대 중반이후 전후 국제질서를 지배해오던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기존의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협력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구환경문제이다.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은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환경보호의 차원을 탈피하여 지구전체 차원의 환경보호와 개발의 추구를 위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법적·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유엔체제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토의분야에는 대기보전(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및 장거리대기오염등), 토양보전, 유해폐기물 처리 및 교역금지등 무생물적 환경분야와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생물등 생물적 환경분야에 대한 관리가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이런 분야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 방안의 모색과 이를 추진키 위한 각종 국제법적·제도적 개편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되어있다.

지구환경보호의 추구에 있어 최대명제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실현인바, 이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 한다는 개념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데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는 각국이 보호조치를 강구해야되고, 이를 위한 예방적, 방지적 조치와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자부담 원칙등 보호조치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과 개발의 우선, 선진국의 산업화로 인한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이에따른 대개도국 재정 및 기술의 특혜적 지원, 개도국의 특수사정등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도 국제환경협력의 가장 두드러진 동향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키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 대비키 위한 준비회의(PREPCOM), 기후, 오존, 생물다양성, 폐기물등 각종 환경관계협약 채택 및 이행관련 교섭, 각종 정치그룹별 회의에서의 선언 또는 결의채택 및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활동등으로 특징 지을수있다.

나. 유엔環境開發會議

(1) 推進經過

1989년에 개최된 유엔총회의 결의(44/228)에 따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각국정상급인사들의 참가하에 21세기를 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어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칭하고 있다.

UNCED는 환경보호와 개발의 양립을 위한 기본행동 원칙으로서 리우선언(Rio de Janeir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해양·대기·산림·토양 및 폐기물등 주요환경 분야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Agenda

21)을 체택하고, 현재 협상중인 기후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도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UNCED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체계설치를 검토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체제개편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으로 있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1년중에는 UNCED의 준비를 위한 회의가 1991년 3월 및 8월 제네바에서 2회 개최되었으며, 1992년 3월 뉴욕에서 최종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우리나라에는 동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Agenda 21 및 국제환경협약에 개도국 및 우리나라와 같은 신 Hong Kong 국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체제의 마련과 아울려 환경규제가 개도국에 대한 비판세 장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것임을 강조하는등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2) 展望

UNCED에서 선진국은 어느정도 확대된 재원의 공여를 약속하는 댓가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추세는 각 Agenda 21의 구속력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법규범화 작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구체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NCED의 개최준비부터 UNCED회의까지 UN의 강화된 체계하에서 동협상이 주도되어온바, 향후 UNCED의 이행감시 및 평가의 기능이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부여되는 경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UN 권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國際環境協約 締結動向

환경협약은 주로 특정환경오염 또는 폐기물질의 배출·처리·교역등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비체약국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로서 경제·통

상제재를 규정하고 있는것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몬트리올의정서는 규제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생산·소비의 감축 스케줄과 비가입국에 대한 교역 규제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체결교섭중인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와 에너지의 국별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교역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처리와 국가간 교역에 대한 엄격한 요건 충족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협약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 특정기간 동안의 규제조치의 적용 유예, 협약 준수에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지원에 의한 멸도의 재정지원체계인 오존기금(Ozone Fund)를 설치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과 협약체결 협상중인 기후변화 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의 내용과 규제조치 및 관련산업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主要國際環境協約概要)

(표1)

國際條約	規制對象	規制內容	關聯產業	備 考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의정서	CFC, 할론, 사염화 탄소, 메틸클로로 포름	- 생산 및 소비 의 전면금지를 위한 단계적감축 - 대비가입국 교역 규제	냉동, 냉장업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전자, 발포, 정밀기계, 소화기	87년 9월 채택 89년 1월 발효 90년 6월 개정 (현재미발효) 73개국 가입
바젤협약	18개 산업폐기물, 27개 중금속, 독성화학물질, 2개생활폐기물	- 생산, 처리, 국가간 교역통제 - 엄격한 기준부여	화공업, 각종 제조업, 의약업, 농업, 운수업	89년 3월 채택 92년 5월 발효예정
기후변화협약	CO ₂ , CH ₄ 등 온난화가스	- CO ₂ 배출의 규제	- 에너지생산, 이용산업 - 각종제조업 - 수송, 교통신업	협약협상 교섭중 92년 6월 채택 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 생물의 종, 생명공학	- 생물종의 이용 및 개발 - 생명공학의 적용	의약업, 농업, 임업, 생명 공학이용산업	협약협상 교섭중 92년 6월 채택계획

라. 우리나라의 環境外交

1991년도에는 과거 그어느때 보다도 국제환경협약 체결동향이 두드러진 한해였다고 할수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음을 감안, 개도국으로서의 1차적 환경규제와 책임부담으로부터 면제를 확보하면서 구체사안별로 우리 국가이익에 따른 환경외교를 전개, 국제환경협약협상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환경협약 협상동향을 살펴보면 1991년 2월 워싱턴에서 제1차 기후변화 협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6월, 9월, 12월에 각각 개최되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사용규제협약 작성 노력이 전개되어 미결사항이 포함된 협약초안이 작성되었는바 우리나라는 동회의에 1차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화석연료 의존국가에 대한 특별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여 동 협약초안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반대 및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전 체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협약은 1992년 2월 제5차회의 및 1992년 5월 뉴욕개최 최종회의에서 성안,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및 제도개편 측면을 교섭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5차 및 6차 회의가 1991년 3월 및 10월에 각각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6월에는 몬트리올의정서 제3차 가입국회의가 개최되어, 의정서 제4조에 의한 무역규제 대상품목으로서, 자동차 및 트럭 에어콘, 가정용 및 산업용 냉장고, 에어콘 및 열펌프, 에러로줄, 이동식 소화기등 6개품목군을 확정하였으며, 동 품목은 1992년 5월 말부터 비가입국과의 교역이 금지되는바, 몬트리올의정서는 1990년 6월 제2차 가입국회의에서 의정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한 이래, 가입국회의를 통하여 오존충파괴 정도에 따른 계속적인 규제조치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동 의정서에 비가입시, CFC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당할수 있음을 감안, 국내산업 피해등을 고려하여 1991년도에는 오존충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등 국내관계법 정비를 마쳤으며 1992년초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0년 11월 제1차 협약협상회의를 개최한이래, 1991년도에는 2월, 6월, 9월, 12월에 실무협상회의가 개최되어 미결사항이 포함된 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는바, 정부는 동협약이 유전공학 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임을 감안 동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접근 및 이전을 용이토록 하고 특허권 및 지적소유권의 행사가 협약목적 달성을 역행되지 않도록 할것을 강조, 협약초안에 반영시켰으며,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등을 강조하였다.

바젤협약은 1989년 3월 채택되었으며, 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가입국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1992년 상반기에 발효 예정인바, 1992년중에는 협약의 내용중 미비사항인 유해폐기물의 교역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가입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관한 국내관계법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UNEP) 주관하의 지역해양보전계획의 일환인 북서태평양지역 해양 보전계획(NOWPA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동해와 황해를 역내 환경협력대상 해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냉전이후의 주요 국제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

서 정부는 환경외교를 UN가입이후 특히 중시되고 있는 다자외교의 핵심분야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구환경의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신흥공업국으로서의 독특한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능동적 환경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8. 北方經濟外交

1991년 들어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의한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와의 경제, 통상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등 동구국가들에 대한 경험자금 제공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동구권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특히 동구국들과 몽골은 한국을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인식하여 한국의 제품생산 기술 및 개발 경험의 전수를 요청하여 오게 되었다.

소련등 동구권 국가에 대한 경험자금 및 EDCF 차관 공여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 명	경험자금 공여추진 내역
소 련	총 30억불 차관(전대차관 15억불, 연불수출 5억불, 은행차관 10억불)
헝 가 리	EDCF 차관 5,000만불
폴 란 드	EDCF 차관 5,000만불
불가리아	EDCF 차관 2,500만불
루마니아	EDCF 차관 4,000만불
몽 골	EDCF 차관 1,000만불

또한, 북방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기술협력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조내역		원 조 규 모
무상원조		102만불(체코 7만불, 불가리아 10만불, 루마니아 25만불, 알바니아 10만불, 몽골 50만불)
기술협력	연수생초정	57명(소련 22, 헝가리 4, 폴란드 6, 유고 4, 체코 4, 불가리아 4, 루마니아 4, 몽골 9)
	전문가파견	6명(헝가리 1, 폴란드 1, 유고 1, 체코 1, 루마니아 1, 몽골 1)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교역, 투자 진출에 필요한 경제협력협정체결도 1990년도에 이어 계속 활발히 추진되어 체코와 투자보장 협정(1991년 5월, 가서명), 이중과세방지 협정(1991년 10월, 가서명), 불가리아와의 이중과세방지 협정(1991년 5월, 가서명),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 협정(1991년 2월, 가서명)의 체결이 추진되었다.

북방국가와의 정부차원의 경협 교섭이 꾸준히 진행되어 1991년 1월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1990년 12월 한·소 정상간에 다져진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1991년 4월 제주도에서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동구 국가들과는 제3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1991년 11월, 부다페스트), 제1차 한·체코 경제공동위원회(1991년 11월, 서울)가 개최되어, 대북방 경제협력에 내실화를 기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대북방 교역도 급격한 신장세를 시현하였다.

소련, 동구, 중국, 베트남, 몽골을 포함한 대북방 교역은 1991년도 67억불에 달하여 1990년도 46.5억불보다 44.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한·중 교역액은 44.4억불로서 전년대비 55.7%의 가장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2차례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중 동 협정이 체결되어 한·중간의 상호투자가 급증함과 아울러 양국간의 교역도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투자 및 인적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투자면을 보면, 특히 대중국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1년 12월 31일 현재 허가금액기준 146백만불에 이르고 있고, 소련 20.5백만불, 폴란드 0.7백만불, 혁가리 49.3백만불을 보이고 있다. 대북방 투자규모는 양국간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북방 경제외교 성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경제,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북방시장의 개척으로 교역규모 확대 및 교역시장의 다변화를 이루었으며, 둘째, 중국, 소련, 몽골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협력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전략은 북한의 경제개방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1년은 또한 동서냉전이 가장 오래 자축된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협력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UNDP) 주관으로 개최된 동북아 지역 협력사업에 관한 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 계획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제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1년 8월 장춘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제2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이어서 UNDP는 울란바토르 회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두만강지역개발 조사 보고서를 검토, 논의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평양회의를 개최, 1992년-1993년 약 18개월간에 걸쳐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실천사항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력 움직임은 1991년 12월 28일 북한 정무원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를 계기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전망을 밝게 하였다.

第2節 開發途上國과의 經濟協力

1.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가. 開途國과의 協力의 重要性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적 경제개발정책과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우리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과의 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증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말 현재 교역액에서 세계 제13위권내의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일원으로서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제 세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다.

즉, 전세계의 수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을 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모델로 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우리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그들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신보호무역주의의 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외교 및 경제에 있어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첫째,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대상 지역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구분에 의하면, 전세계 국가중 139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반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규모 여하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외교적 중요성이 더욱 크다.

둘째, 교역대상국으로서 개도국의 중요성이 점증하여 왔다. 우리나라 교역의 대부분은 미·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도국과의 교역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對開途國 交易比重 推移〉

(단위 : %)

구 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990	1991
수 출	11.3	25.3	12.7	20.0	31.7	29.0	26.2	30.7	31.3
수 입	9.3	15.2	16.8	27.1	35.6	36.0	26.4	28.9	21.9

선진국 의존적인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교역증대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교역대상으로서의 개도국의 비중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자본재 수입을 중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재 도입선을 우리나라로 전환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중화학제품 수출시장으로서 개도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개도국은 중요한 대상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의 해외투자는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자원개발 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개도국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우회수출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의 지속적 확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비교 열위산업설비의 해외이전 등의 필요성에 따라 개도국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海外投資 現況〉

(단위 : %)

구 분	1982	1985	1989	1990	1991
선 진 국	49	50.4	57.8	63.2	56.3
개 도 국	51	49.6	42.2	36.8	43.7

넷째,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자원도입 대상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대부분의 자원을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도입의 증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자원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따라 자원 공급선으로서 개도국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다섯째, 해외건설시장 및 인력진출 대상지역으로서 개도국의 위치이다. 1960년대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설 및 인력진출은 우리의 경제성장, 외화획득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다만, 1980년대초 유가하락 및 취업여건 악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해외건설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개도국은 우리의 주요한 건설 및 인력진출 시장으로 존속할 것이다.

나. 對開途國 經濟協力의 必要性

개도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정치,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도국

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개도국은 우리나라를 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지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의 활성화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선진국과의 협상능력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2-3년내에 수교한 사회주의권 국가의 상당수가 개도국에 속하며, 이들이 모두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개도국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둘째,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우리의 자본 및 기술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공업시설투자등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하는 반면, 저축 및 수출의 부진, 외채누증등으로 투자재원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합작투자, 금융지원 등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극복 등을 위한 시장다변화 필요성에 비추어 향후 개도국 진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각종 협력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세째, 신흥공업국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 분담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후발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요청의 형태로 표면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요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개도국에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1990년대 들어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요구 형태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주로 신흥공업국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선진국의 경제조치 강화로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교역증대가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 수출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개도국과의 협력을 경시할 수 없다. 개도국은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본재 및 플랜트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화학 제품의 수출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교역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비교열위 산업의 설비를 개도국에 이전하거나 개도국에 대한 합작투자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원보유 개도국들의 자원보호주의 강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개도국 협력이 필요하다. 자원보유 개도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경향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걸프사태 발생시 자원공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원 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개도국과의 장기적 협력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개도국은 중요하다. 한국인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이전수입 증가가 기대되며, 나아가 해외교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2.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 現況

가. 韓國의 ODA 供與實績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는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기자재 공여, 기술협력 및 경제협력 차관공여로, 후자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상기 분류방식에 입각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ODA 공여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ODA 實績〉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 양자간 ODA					
○ 기자재 공여	9.1	11.4	12.6	11.5	12.4
○ 기술 협력	8.2	8.5	8.5	7.5	4.5
○ 경제협력 차관공여	-	-	1.8	10.0	6.7

구 分	1987	1988	1989	1990	1991
2. 다자간 ODA					
○ 출자금	49.9	28.4	32.2	42.4	17.9
○ 분담금	5.8	6.7	8.7	8.5	12.2
계	73.0	55.0	63.8	79.9	53.7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실시한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機資材 供與 事業

기자재 공여(무상원조)사업은 1977년 9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증가폭은 우리의 경제성장 정도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1977년 이후 1991년까지의 기자재 공여(무상원조)사업 실적은 총 1억378만불이었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동지역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機資材 供與事業 實績〉

(단위 : 천불)

구 分	1977-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아 시 아	6,394	2,118 (15)	1,935 (17)	2,407 (21)	2,266 (19)	2,620 (19)	3,919 (23)	21,659
중 남 미	10,331	3,381 (26)	2,928 (26)	3,569 (27)	3,505 (27)	3,068 (28)	3,339 (26)	30,121
중 동	2,655	464 (5)	869 (6)	1,127 (9)	1,096 (7)	992 (8)	623 (5)	7,826

구 분	1977-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아프리카	18,816	2,532 (23)	3,368 (24)	4,340 (27)	4,403 (27)	3,769 (29)	3,468 (30)	40,696
동 구	-	-	-	-	-	609 (5)	545 (5)	1,154
기 타	42	-	-	-	1,289	509	479 (5)	2,319
계	38,238	8,495 (69)	9,100 (73)	11,443 (84)	12,559 (80)	11,567 (89)	12,373 (94)	103,775

(주) ()내는 국가수

기자재 공여사업은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증진,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남남협력 및 통상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도적 견지에서 천재지변시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여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산 기자재를 공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자재 공여사업은 각종 경제협력 방식중에서 개도국 요구에 가장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증진은 물론, 국산 기자재 등의 우수성을 각국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최빈국이 다수를 점하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적 인간욕구(basic human needs)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의 북방외교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동구권이 우리나라의 기자재 공여 대상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技術協力

기술협력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수준의 경험 및 기술이 그들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1987-1991년간 기술협력사업의 집행예산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技術協力事業 實績〉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연수생 초청	1,593	1,927	2,164	2,050	1,209
전문가 파견	476	499	514	658	163
무상기술용역	710	801	974	975	1,024
개발조사사업	30	38	103	148	35
직업훈련원지원	1,120	642	21	33	249
청년봉사단파견	-	-	-	326	554
계	3,929	3,907	3,776	4,190	3,234

연수생 초청훈련이 1963년 시작된 이래 1991년까지 총 4,141명의 개도국 연수생이 국내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자, 연구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우호 친선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인근 아주지역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실시분야면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제1차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 비중이 큰 반면, 아시아 및 동구국가들의 경우는 경제·행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자국경제의 발전에 진요한 부문에 협력요청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研修生 招請實績〉

(단위: 명)

지역	년도	1987	1988	1989	1990	1991
아시아	264	276	301	289	176	
중동	39	57	71	61	27	
아프리카	90	95	105	66	41	
중남미	64	81	108	111	58	
동구	-	-	-	49	60	
기타	-	4	12	4	-	
합계	457	513	597	580	362	

전문가파견 실적의 경우, 1967-1991년간 총 540명의 전문가를 아시아지역 278명, 중남미지역 124명, 아프리카지역 91명, 중동지역 34명, 기타지역에 13명 순으로 분산 파견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수산분야의 전문가 파견이 가장 많으며, 광공업분야, 과학·교육·행정분야, 보건·사회분야 순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술협력사업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그밖에도 무상기술용역 제공사업,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개발도상국에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을 파견하여 풍토병의 예방·치료와 태권도 보급등 현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선린 우호관계 구축에도 노력하여 왔다.

1991년말 현재 의료단 13명, 태권도사범 18명, 양궁코치 1명 등 총 32명이 파견되어 있다.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1990년 제1기 단원 40명에 이어, 1991년 제2기 단원 36명이 아시아 여러나라에 분산 파견되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술·보건·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인류애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접수국 국민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도국의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기술협력 제공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라. 對外經濟協力 基金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설치와 더불어 크게 확대되어 있는 바, 2국간 경제협력 자금으로서의 EDCF는 1986년 기금설립법이 제정되어, 1987년이후 1991년 말까지 총 2,90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基金造成 實績 및 計劃〉

(단위 : 억원)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출 연 금	300	200	500	100	100	1,200
차 입 금	-	-	400	-	500	900
운용수익	9	48	93	257	395	802
계	309	248	993	357	995	2,902

1992년 4월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등 12개국 15개 사업에 1억 5,800만불의 지원이 결정되고, 루마니아 통신망 확충사업 등 11개국 1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700만불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개도국 협력수단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정부는 개도국의 자금협력요청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원사업 증가로 우리정부의 ODA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3. 評價 및 向後 推進方向

가. 對開途國 國際協力의 現況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의 창설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실시 체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옴과 동시에 장기적인 정착하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개도국의 협력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남남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발전 및 우리의 국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규모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역량 및 국제적 지위향상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설 현판식(1991. 4. 16)

최근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억불 미만으로 ODA/GNP 비율로 보면 0.04% 수준에 불과하여, UN 제시 수준 0.7%,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평균수준 0.35%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1961년 일본의 ODA 규모 0.2%(1.07억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른 국제적 책임분담 요구증대와 19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전제로 전망할 때 ODA 규모의 점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둘째, 대개도국 경제협력 예산상의 제약으로 각 사업간의 연계 실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은 그 역사가 일천하여 국제협력에 대한 노하우

(Know-how) 및 자료 부족등으로 말미암아, 사업간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효과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사업간 연계실시를 통한 국제협력사업의 성과제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나. 國際協力의 發展方向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 아닌 선발개도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재원과 기술력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제협력의 장기발전 방향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상응하는 한도내에서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충과 동시에 우리에게 알맞는 협력모델 개발,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모색 및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통한 우리의 협력사업 규모확대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기자재 공여사업, 기술협력사업, 유상자금 협력을 상호 연계하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각 협력사업을 종합화하여 원조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력대상지역에 있어서는 협력수단의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바, 지리적 인접성 및 경협증진 가능성이 큰 아·태지역에 대하여는 기술·인력협력사업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최빈개도국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기자재 공여사업 위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의 사업규모 확대와 아울러 대내외적 여건조성 및 국민적 합의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함으로써 개도국의 다양한 협력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第3節 亞·太 協力

1. 亞·太 協力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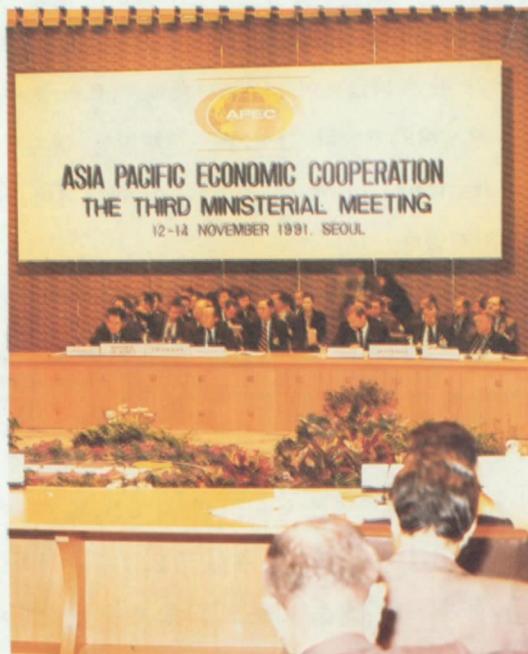
아·태지역 국가간의 지역 협력논의는 유럽에서 EC가 발족된 후인 1960년대 중반부터 주로 이 지역의 학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인을 중심으로한 태평양 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omic Cooperation : PBEC)가 창설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cific Forum for Trade and Development : PAFTAD)가 창설 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호주, 일본이 주동이 되어 정부, 학계, 경제계의 3원적 협력기구인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PECC)가 창설되어 비정부 차원에서 역내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통해 이룩된 고도성장을 지속시키고 점증하는 상호 의존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 지역의 계속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차원의 지역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대두로 아·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여온 GATT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도전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역 협력체 창설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 외무장관 및 경제각료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 경제협력(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APEC은 그간 1989년 호주, 1990년 싱가폴, 1991년 한국에서 각각 3차례의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체로 정착되고 있으며, 1991년 11월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서 중국, 중화민국, 홍콩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15개로 늘어났다. APEC의 기능과 역할도 점차 강화되어 무역, 투자, 기술이전, 인력자원 개발등 10개 분야에 걸친 공동 협력사업은 물론 역내 무역자유화 방안, 역내 경제동향 및 공동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도 수행하고 있다.

2. 1991年度 亞·太 協力 推進 實績



제3차 아·태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1991.11.12-14, 서울)

정부는 1989년 출범이후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로서 꾸준히 성장해온 APEC을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APEC 기구화등 제도적 발전문제, 역내 주요 경제실체인 중국·중화민국·홍콩의 APEC 가입 실현, APEC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태 협력 추진을 위해 역내 민간협력기구인 PECC, PBEC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이를 기구들과 APEC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가. APEC

(1) APEC의 制度的 發展의 礎石 마련

1989년 비공식적 협의포럼으로 출범한 APEC은 2차례의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APEC 회원국들에게 공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우선협력사업에 착수하였고, 제4, 5차 각료회의 주최국의 결정으로 연례 각료회의의 형태로 정착되었으나,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냉전 붕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UR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보호주의·지역주의 대두등 불확실한 국제경제환경은 우려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1년 3월 개최된 제2차 제주도 고위실무회의에서는 APEC의 장래 방향 설정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간의 공동 인식이 도출되었고, 필요한 경우 APEC의 법적, 제도적 기초가 될 APEC 기본문서 제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의장국 자격으로 그동안의 APEC 활동을 토대로 APEC의 목적, 운영방식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APEC선언 초안을 작성하여 1991년 8월 개최된 제3차 경주 고위실무회의에 제출하였고, 그후 APEC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후 마침내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서 「서울 APEC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공동협력사업이 진전을 이룸에 따라 협력사업간 조정문제등 APEC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설치와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회원국간에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3차 경주 고위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회원국간 활발한 토의를 유도하였으며, 제3차 각료회의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서는 고위실무회의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92년 방콕 각료회의에 전의안을 보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APEC 기구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中國·中華民國·홍콩의 APEC 加入實現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실체로 등장한 중국·중화민국·홍콩의 APEC 가입은 APEC 출범시부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나, 동 문제가 가진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중국·중화민국·홍콩을 동시에 APEC에 가입시킨다는 제2차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 서울 각료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하에 1990년 10월 개최된 제1차 서울 고위실무회의에서 이들 3중국의 APEC 가입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한국은 이들 3중국과 10개월간 5차례 걸쳐 막후 협상을 진행하였고, 1991년 8월 제5차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이 받아들여져, 중국·중화민국·홍콩의 각료들이 서울 각료회의에 참석함으로써 APEC은 아·태지역 주요 경제실체를 모두 포용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3) APEC의 機能과 役割 強化

APEC의 제도적 발전, 3중국 가입문제와 더불어 APEC의 기능과 역할 강화문제는 APEC이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진행중인 분야별 공동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역내 무역 및 경제정책 협의·조정분야로 APEC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제2차 제주도 고위실무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현안 및 동향 파악을 위한 특별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무역정책면에서도 우선 당면한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함께 UR 타결이후 GATT 수준이상의 추가적 무역 자유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그룹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은 경제현안·동향그룹을 중심으로 비인플레적 경제 성장등 주요 경제현안을 발굴하고, 1990년대 역내 경제동향을 전망하여 서울 각료회의 토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역내 무역자유화 그룹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원칙, 범위, 방법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야별 공동협력사업의 진전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협력사업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1차 서울 고위실무회의에서 한국에게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였다. 1991년중 협력사업은 양적측면에서 수산, 교통, 관광의 3개 협력사업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역내 무역 및 산업정보교환을 위한 APEC 전자정보망(ELIN)이 설치되고, 2000년대 역내 전무역문서를 전자교환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등 APEC 회원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APEC 의장국 그룹인 호주, 싱가폴, 미국, 태국들과 협조하여 지난 2년동안의 협력사업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각료회의에 제출함으로써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4) 第3次 서울 閣僚會議 評價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PEC을 아·태지역 협력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한국은 1991년 11월 12일~14일간 서울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아·태지역 주요 플레이어(player)로서의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

APEC 15개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각료 26명을 비롯, 총 700여명이 참석한 서울 각료회의는 서울 APEC 선언 채택, 중국·중화민국·홍콩의 APEC 가입 실현, APEC 기구화 문제 본격 검토, 1995년 제6차 각료회의 주최국 결정(인니) 등으로 APEC 초기의 비공식 협의포럼에서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서울 APEC 선언 채택으로 APEC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었고 향후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중국·중화민국·홍콩의 APEC 가입 실현으로 APEC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 세계 총교역량의 40%를 점유하는 경제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역내 주요 경제실체를 모두 포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아·태지역의 광역적 협력의 구심체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울 각료회의는 또한 APEC이라는 다자외교의 장을 통하여 양자 외교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우리는 미국, 일본 외무장관과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교환을하고 상호 정책을 조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미 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침 외교부장의 대통령 예방 및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통하여 양자문제에 관한 중요한 협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 각료회의의 또 다른 성과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역내 문제인 중국·중

화민국·홍콩의 APEC 가입을 한국이 주도하여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아·태 시대에서 한국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나. 亞·太地域 民間協力機構와의 協力

APEC을 아·태 경제협력의 구심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한국은 제8차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총회(1991년5월20일~22일, 싱가풀), 제24차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총회(1991년5월4일~8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역내 민간협력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제24차 PBEC 총회에서는 1993년 제26차 PBE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아·태지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과시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를 민간기구들이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APEC과 이들 기구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PECC의 태평양 경제전망(PEO)과 6개 분야 task force 활동결과가 APEC 협력사업에 기여하였고, PBEC도 APEC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현재의 특별위원회를 APEC 공동협력사업체제에 맞게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3. 亞·太 協力 推進方向

1970~80년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한 아·태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에서 경제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명실공히 「태평양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하여 명실공히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를 비롯한 제반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해야 될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국가적 과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동서 태평양 양안간의 건실하고 균형된 경제관계 발전이 아·태지역의 발전과 번영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동아시아, 북미, 대양주를 모두 포용하는 APEC이 그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PEC의 기구화를 통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아·태지역 주요 경제실체를 모두 포용하는 APEC의 발전을 통해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의 안정적 시장 접근 확보와 함께 우리기업의 역내 진출여건을 개선하고, GATT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불안정과 EC 통합, 북미 FTA 형성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방외교에 뒤이은 태평양 외교로 우리 외교의 행동반경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통일이후를 내다보고 아·태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